
 ◆ 政府 施策 ◆

技術集約型 중견 · 중소기업 育成

— 通産部, 산업기술개발, 기술하부구조확충 5개년 계획 확정 —

통산산업부는 내년부터 오는 2천년까지 2조 1893억원을 투입, 현재 선진국대비 45~58% 수준에 불과한 기반기술, 산업기계, 일반기계 등 6개 산업부문의 기술수준을 65~75% 수준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 기술집약형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기반확충 사업에 내년부터 오는 2천년까지 2조 834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통산부는 산업기술전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산업기술개발 5개년계획과 기술하부구조확충 5개년계획을 각각 심의·확정했다.

통산부는 두 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은 최소투자로 최대효과를 얻기 위해 원칙적으로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정부가 대응부담(MATCHING FUND)하는 형식으로 또 프로젝트 베이스로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기술개발 5개년계획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 특화가 요구되는 기술 △산업전반의 제품에 공통요소적이고 기반적인 기술 △소재·부품 등 산업구조적으로 취약한 핵심기술 △공공·민간시장이 혼합된 기술 △생산성제고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자동화, 시스템화 기술 △중소기업 및 농업 등 특수성이 고려돼야 할 기술 등에 초점을 맞춰 550개 세부기술과제를 선정했다.

이를 6개 산업부문별로 보면 기반기술부문이 7개분야에 88개 기술, 산업기계부문은 6개분야에 86개 기술, 일반기계부문에서는 4개분야에 44개 기술, 전기·전자부문에서는 13개 분야에 186개 기술, 화학부문에서는 6개분야에 73개 기술, 생활·섬유부문에서는 7개분야에 73개 기술을 각각 개발할 계획이다.

통산부는 계획된 기술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50개 과제에 대해 시급성(지원시점), 시의성(지원기간) 및 지원규모 등을 종합검토해 연도별 개발계획을 수립·시행키로 했다.

특히 WTO협정 등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정부의 기술개발자금을 확대해 집중지원하고 기술개발이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기술개발부터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해나가고 기술개발의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기술개발의 진도관리와 환류기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기술하부구조확충 5개년계획에서는 오는 2천년대에는 소수의 대기업보다는 다수의 기술집약형 중소·중견기업이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보고 이러한 기업의 육성을 위한 기술하부구조 확충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이들 기업의 최대 애로인 기술개발에서의 위험과 사업화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기술평가제도 및 보험제도를 도입하고 벤처기업의 창업과 활성화를 위해 창업, 사업화 및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총체적·시스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원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계획의 주요내용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기술인력의 탄력적 공급기반 구축부문에서는 직업 기술교육체제의 최상급 교육기관으로 산업기술대학을 98년 3월에 신설해 전국공단과 연결, 원격교육을 실시하고 KAIST 등 정부출연기관을 중심으로 탄력적인 고급기술인력 양성체제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산·학·연 공동 연구기반의 구축부문에서는 산·학·연공동연구센터를 3개 지역에 시범적으로 설치한 후 대상지역을 2천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고 97년까지 2~3개의 시범적인 테크노파크를 조성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신기술보육사업을 전국대학에 확대하고 섬유패션센터·자동차부품 성능시험장을 건설하는 등 중소기업의 공용연구시설 설립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정보유통체제 구축부문에서는 업종별 정보센터를 전업종으로 확대해 업종별 산업정보화를 추진하고 지역별 산업정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업종별·지역별 정보유통체제를 구축한 후 이를 산업정보전산망과 인터넷 등 국제 컴퓨터통신망에 연결해 기업의 CALS체제 도입을 촉진할 방침이다.

산업표준화부문에서는 자본재표준화 및 산업정보표준화를 확대하고 색채표준화를 추진해 CALS체제의 도입과 부품·소재 공용화에 기여하고 단체표준 제정기관을 확대해 표준화기반을 넓힐 예정이다.

두 계획의 시행 첫해인 내년도 주요 추진사업을 살펴보면 산업기술개발부문에서는 정부 1271억원, 민간의 대응투자 1111억원 등 총 2382억원을 투자해 총 43개분야 101개 세부기술과제에 대한 기술개발이 추진되는데 정부는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및 자본재 전략품목에 대해서는 총소요자금의 75%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 산업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공통으로 및 기반기술의 적극적 개발유인을 위해 기술료 미징수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공업기반기술 개발자금·공업발전기금·산업기술기반조성자금등 기술개발자금을 산업기술자금으로 통합해 연계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술하부구조 확충부문에서는 정부예산 374억원 등 공공부문 722억원과 민간의 대응투자 1536억원 등 총 2258억원을 투입해 29개의 산업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동차부품 설계인력양성 등 기술인력의 탄력적 공급을 위한 10개사업에 정부예산 147억원이, 산·학·연 공동연구반 조성을 위한 8개 사업에 정부예산 95억원이 각각 투입되며 산업 정보화·표준화를 위한 4개사업에도 정부예산 15억원이 투입된다.

통산부는 두 계획이 완료되는 2천년에는 민간주도의 네트워크형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이 구축돼 기술획득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교환비용이 줄어들고 연구개발의 생산성이 증대되며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이 대거 육성돼 자생적인 기술혁신 능력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각 산업별 기술수준이 한층 향상돼 주력산업에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기술선진국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

工基盤기술 신규과제 204개 확정

— 通産部, 3년간 정부지원 1829억등 총 3732억원 投入 —

정부는 공업기반기술 신규과제 지원대상으로 모두 204개 과제를 확정하고 이들 과제에 대해 3년간 정부지원 1829억원, 민간부담 1903억원 등 총 3732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이같이 공업기반기술 신규과제 지원대상을 확정하고 1차년도인 올해 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 230억원, 참여기업 부담 237억원 등 모두 467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상반기에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109개 기술개발 대상분야를 선정, 이를 6월에 공고한후 520개 과제를 접수해 2300여명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분야별 평가위원회와 공업기반기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것이다.

통산부는 기술과제 공모방식을 그동안의 개별 기술과제 중심에서 기술분야별 과제공모 방식으로 전환, 수요조사에 참여하지 못한 기업 등에서도 해당기술분야에 속하는 개발과제면 이를 지원 신청할 수 있어 예년의 평균경쟁률 1.5대 1보다 높은 약 2대 1의 경쟁을 보였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개발참여기관의 자격제한을 대폭 완화해 실질적인 연구개발 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발의 필요성이 강하나 개별기업 입장에서는 단독투자가 어려운 기술개발 분야에 대해서는 개발완료후 기술료를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요조사시에 반영되지 않은 분야로서 우수한 과제나 지방중소기업 등에 대해 응모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유응모과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관련업계의 관심도를 크게 높였다.

지원대상 과제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동애로기술이 선제응력 기술개발시스템 등 189개, 중기거점기술이 수직제어장치 등 4개사업, 국자동차내 유입공기 정화용 한국형 고효율 공기필터개발 등 11개 과제 등이다.

참여기업별로는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이 160개로 전체의 79%를, 기업간 공동개발이 102개로 전체의 50%를 각각 차지했다.

기술개발 주관기관별로는 기업이 주관하는 사업이 117개로 전체의 57%, 대학이 참여하는 사업이 30개로 15%, 정부출연연구소 참여사업이 32개로 16%를 각각 차지했다.

■ 공동애로기술 개발사업

○ 중전기(2개 과제)

- 고정주파수 13.56MHZ의 알에프 제너레이터 및 자동메칭 시스템 /서울산업대학교
- 인쇄기용 55KW급 유도전동기 구동용 인버터 개발 / (주)유성기전

中小企業 공장설립 規制 완화

— 通産部, 공업배치등 법률시행령개정 시행 —

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 내에서의 중소기업공장 입지 허용범위와 수도권내 공장의 이전·증설 허용범위가 대폭 확대돼 기업들의 공장용지 확보가 쉬워지게 됐다.

통상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령을 확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정부에서 마련한 ‘중소기업 공장입지 애로해소 종합대책’과 ‘산업용지 공급원활화방안’의 주요내용을 법제화하고 수도권소재 기업에서 제기된 공장설립상의 애로사항과 공업단지내 입주기업의 공단용지 처분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산업입지 공급원활화 대책을 반영, 기업이 장래 공장증설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부지가 공업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지라도 수도권 외지역에 소재한 공장으로서 당해 초과부지가 입지 기준면적의 20%이내인 경우에는 이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또 아산국가공업단지(포송지역)에서는 대기업의 신설도 허용된다.

중소기업 공장입지 애로해소 종합대책과 관련해서는 성장관리지역에서 중소기업공장의 입지허용 범위가 폐지돼 중소기업의 경우 공업지역·비공업지역 관계없이 자유롭게 공장설립이 가능하다.

또 과밀억제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공장의 성장관리지역으로의 이전이 허용되며 자연보전지역중 공업지역과 비공업지역에서 각각 신·증설이 가능한 업종이 종전 231개 업종에서 337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남자용 기성복양복 제조업, 김밥 등 곡물조리식품제조업, 금고, 저울제조업 등이 신규로 신·증설할 수 있게 된다.

수도권내 공장의 이전·증설 허용범위도 확대, 성장관리지역에 소재한 대기업공장 중 경쟁력 강화를 위해 증설이 허용되는 업종을 종전 7개에서 전자직접회로 제조업, 일반여객 및 화물자동차 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진 및 광학기기 제조업 등 3개 업종이 추가해 10개 업종으로 늘렸다.

또한 자연보전지역에 소재한 공장의 창고증설 허용면적을 종전 500평방미터에서 1천평방미터로 확대, 기업들의 물류난을 완화해 줬다.

이와 함께 자원재활용 관련공장 중 폐자원을 가공처리하는 공장에 대해서만 수도권 안에서 공장설립을 허용하던 것을 폐자원을 이용해 재활용제품을 생산하는 공장도 설립이 가능토록해 자원재활용산업에 대한 입지지원이 확대된다.

분양받은 공단용지에 대한 처분절차를 간소화, 입주기업이 별도법인을 설립하거나 제조공정상 필요한 경우, 미분양용지가 있는 경우는 입주기업이 직접 대상자를 선정해 처분할 수 있게 했다.

HSK 품목 1만 859개로 확대

— 財經院, WCO결정 HS수정협약 수용 —

내년 1월1일부터 관세율 적용 및 무역통계 작성의 기초가 되는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HSK)’상의 품목(10단위 기준)이 1만 502개에서 1만 859개로 357개 늘어난다.

재경경제원은 세계관세기구(WCO)에서 결정된 HS수정협약을 국내에 수용하는 동시에 교역량의 증감, 시장개방 확대등 교역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각 부처의 의견을 받아들여 HSK를 일부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재경원은 지난 93년 WCO총회에서 채택,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되는 수정협약을 수용하면서 우루과이라운드(UR) 양허세율에 변경이 없는 범위내에서 HSK 10단위 기준 202개 품목을 늘리기로 했다. 또 통상산업부·농림수산부등 정부 각 부처가 조정을 요청한 1359개(HSK 10단위 기준) 품목중 194개 품목의 분류번호를 신설하고 기존의 39개를 삭제했으며 42개를 변경했다.

이로써 HSK 10단위 품목분류번호는 현행보다 총 357개 늘어나게 됐다.

재경원은 이에 맞춰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도 세계무역기구(WTO) 양허세율 및 기본세율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로 인해 일부 품목의 경우 내년부터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번호가 바뀌게 되지만 관세율은 현행과 변동이 없게 된다. 다만 품목분류번호가 변경된 품목의 경우 내년부터 변경된 번호로 수출입 통계등이 작성돼 내년 이후와 올해 이전에 작성된 동일품목의 통계가 일관성이 없는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

재경원의 관계자는 “이같은 통계의 일관성 문제 때문에 각 부처의 품목분류번호 조정 요구사항을 최소한도로 수용했다”고 밝혔다. 한편 HS(Harmonized System)는 WCO가 관세·무역통계·운송·보험등에 세계 공통으로 사용키 위해 국제협약으로 제정, 지난 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품분류체계로 세계 103개국 이 시행하고 있다.

WCO는 6단위를 기준으로 5018개의 품목을 게시하고 각국은 이를 기초로 품목을 자국 사정에 따라 세분류하는데 우리나라는 10단위 분류코드에 의거 상품을 분류하며 이를 HSK(Harmonized System of Korea)라고 한다.

▲ 산업별 HSK품목수 현황

| 구 분 | H S K 품 목 수 | | |
|-------|-------------|------------|--------------|
| | 4단위 | 6단위 | 10단위 |
| 전 체 | 1,241 | 5,113(+95) | 10,859(+357) |
| 공 산 품 | 1,041(+1) | 4,408(+88) | 9,215(+228) |
| 농 산 물 | 200(-1) | 705(+7) | 1,644(+129) |

()안은 개정전과 대비수치임

代替에너지 기술개발課題 확정 - 通産部, 내년 49개에 120억원 지원 -

정부는 내년에 태양광·태양열·바이오에너지등 9개분야, 49개 과제를 대상으로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한다.

통상산업부는 이같이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연구과제를 확정하고 정부지원 사업비 12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연구개발의 목표를 실용화기반 구축에 두고 첨단기술로 개발 파급효과가 큰 태양광발전, 연료전지 및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분야등에 역점을 두어 지원할 계획이다.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사업은 에너지자원기술 개발지원센터에서 매년 과제를 공모·접수해 서면 평가 및 공개평가를 한후 통산부의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은 향후 우리나라의 에너지공급 취약성을 극복하고 에너지원의 다양화를 도모하는 한편 그린라운드(GR)등 세계적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화석연료의 고갈에 대비한 미래 에너지 개발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정부는 그동안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태양열 온수기를 국산화해 작년까지 2만 6700기를 보급했고 태양광발전시스템을 개발해 100kW급 발전소를 설치했으며 80개소의 메탄가스 이용시설, 660여개소의 폐기물 소각열 이용시설을 각각 설치했다.

또한 300kW급 풍력발전설비를 개발해 설치중이며 미래의 新발전방식인 연료전지에 대해서도 40kW급을 개발해 시험운전중에 있다. 한편 정부는 연구사업의 지속적인 확대지원으로 대체에너지 수요시장의 기반조성 및 개발을 적극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工發基金 · 산업기반기금으로 변경 - 기술개발자금도 산업기술자금으로 통합운영 -

내년부터 유통근대화자금, 중소기업기반조성자금이 기술개발분야를 제외한 공업발전기금에 흡수·통합되고 기금의 명칭도 산업기반기금으로 변경돼 운영된다.

기금운용도 기존의 생산성향상 위주에서 사업구조고도화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물류·환경·입지등 산업인프라 구축사업에 중점 지원된다.

이와 함께 산업기술기반조성자금, 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 공업발전기금 중 시제품개발 및 첨단기술개발자금 등 기술개발관련 모든 기금·자금이 산업기술자금으로 통합·운영된다.

통상산업부는 WTO(세계무역기구)체제하의 산업지원용 재정자금 개편작업의 일환으로 이같이 산업기반기금과 산업기술자금의 운영체제를 전면 개편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공업발전기금 중 기술개발자금은 산업기술자금으로 분리되고 합리화사업과 염색공단폐수처리시설확충사업은 생산성향상 및 고부가가치화사업에 통합돼 생산성향상, 산업공해시설개체, 고부가가치화 등에 중점 지원된다. 또 기존의 유통근대화자금을 산업기반기금에 통합해 유통합리화사업을 신설하고 유통정보화, 공동집배송단지 건립, 협동화, 물류표준화 등 산업인프라 확충에 중점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중소기업기반조성기금을 산업기반기금에 통합, 중소기업 설비투자와 제품구매를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기술자금의 경우 우선 각종 기술개발자금 및 기금을 통합, 관리체계만 개선하고 연차적으로 세부 운영지침도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산업기술기획과에서 총괄관리하되 개별 사업관리 및 자금운용은 산업기술기반조성자금은 산업기술기획과에서, 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과 공업발전기금 중 시제품 및 첨단기술개발자금은 산업기술개발과에서 나누어 수행키로 했다.

▲ 내년도 산업기반기금 운용계획

(단위:백만원)

| 구 | 분 | '96 계획 |
|----------------|---|---------|
| 생산성향상 및 고부가가치화 | | 73,000 |
| -생산성향상 | | 40,000 |
| -산업공해시설개체 | | 28,000 |
| -고부가가치화 | | 5,000 |
| 유통합리화<신설> | | 43,400 |
| -유통정보화 | | 2,000 |
| -공동집배송단지건설 | | 29,200 |
| -협동화 | | 3,600 |
| -물류표준화 | | 8,600 |
| 중소기업기반조성<신설> | | 315,000 |
| -설비투자 | | 230,000 |
| -제품구매 | | 85,000 |
| 합 | 계 | 431,400 |

ISO 14021 내년 國際規格化

- 업계 환경광고등 주의필요 -

환경라벨링 규격중 일부 규격인 환경용어 및 정의에 대한 규격(ISO14021)이 최종정리돼 금년 말 각국의 투표를 거쳐 내년중 국제규격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공업진흥청에 따르면 최근 서울에서 개최됐던 제4차 환경라벨링 국제회의에서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12개 주요 환경용어 및 정의에 대한 규격이 최종정리됐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이들 용어의 정의에 입각해 환경광고나 표시를 사용해야 한다.

특히 수출상품에 대한 환경광고나 표시사용의 경우 수출시장의 여러가지 형편을 감안해 용어를 사용해야 하므로 국내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서울회의에서 최종정리된 12개 용어에 대한 요건 및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재활용자재 · 재활용률

소비전 그리고 소비후 재활용물질에 대해서만 재활용 함유율을 고려할 수 있으며 제품과 포장에 관한 재활용 함유율은 각각 별도로 해야 함

▲자원사용감소

쓰레기로 버려질 그리고 원료 또는 제품의 형태로 사용전환될 수 있는 제품이나 포장 그리고 그것의 구성부분으로부터 기존과정을 통해 추출되어질 수 있는 것.

▲고형폐기물감소

시장으로 들어가는 물질이 양적인 면에서 상대적으로 감소되는 것과 관련되며 재활용 기타 수단을 통한 쓰레기발생의 감소에 초점을 둠.

▲에너지효율적인

동종제품보다 에너지를 덜 소비하는 제품을 의미하며 성능시험방법이 확인되어야 하고 명확한 추가 정보가 수반되어야 함.

▲물사용효율

동종제품보다 물을 덜 사용하는 것으로 성능시험 방법이 확인되어야 함

▲제품수면연장

제품의 전과정에 대한 환경적 검토에 근거해야 함

▲재충전가능한

그것의 원래 목적을 위해 재충전되고 재사용되어야 하며 사용제품을 수집하고 재사용·재충전할 프로그램이 존재해야 하며 구매자가 재사용·재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나 제품을 말함.

▲재활용가능한

마크를 부여한 제품·포장을 재활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수집시설이 주민의 합리적 비율만큼 손쉽게 이용되지 못할 경우 조건적 주장이 필요.

▲해체

해체라는 주장은 제품이 재활용·재사용의 범주로 투입되는 마지막 유용한 시점에서 분해되도록 설계됐을 때 사용됨.

▲퇴비화가능한

미생물의 자연적 대사작용으로 분자가 분해되는 것과 상대적으로 동질적이며 안정된 부식토와 가트 물질로 전환되는 것.

▲분해성·생분해성

분해가능한 물질이란 버려졌을 경우 쉽게 환경에 동화될 수 있도록 분해되는 것을 말하며 주로 곰팡이와 박테리아 같은 미생물을 통해 분자가 파괴되는 유기물질을 말함.

EU, KEY마크 導入추진

- 강제인증사항 아니나 輸出영향 -

EU(유럽연합)가 CE마크 도입에 이어 'KEY마크'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국내 수출업체의 사전 대응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

공업진흥청에 따르면 EU는 역내 각종 적합성마크 제도를 KEY마크 제도로 통합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KEY마크는 EU의 통합된 품질표시제도로 우리나라의 KS마크와 비슷한 제도인데 CE마크와는 달리 강제인증제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KEY마크 제도의 도입배경이 역내산업의 품질경쟁력을 제고하고 품질마크제도를 통해 소비자의 제품품질 식별능력을 제고해 우수제품만이 유통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인만큼 국내 수출업체들의 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KEY마크가 對EU 수출시 반드시 획득해야할 인증제도는 아니지만 제품에 부착돼 소비자가 KEY마크 획득제품과 획득하지 못한 제품을 뚜렷하게 식별할 수 있어 우리나라 제품의 유럽지역 수출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KEY마크 획득을 위해서는 제조업자의 품질 관리시스템 구축과 일정수준 이상의 품질확보를 위한 유럽통합규격의 요구조건에 적합해야 하며 마크획득 뒤에도 일정수준의 품질이 유지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주기적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

공진청은 이같은 KEY마크의 중요성을 감안, 유럽통합규격을 갖춘 제품을 중심으로 KEY마크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관련업체와 긴밀한 협력채널을 구축해 KEY마크제도 운영동향과 제품별 EU통합규격, 제품 및 제조자 품질관리시스템을 평가하는 시험인증기관 소재지 등 관련정보를 수집해 즉시 수출업체에 제공할 계획이다.